

2024 회 계 연 도

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예 비 심 사 보 고

국 토 교 통 부 소 관

2025. 8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
>>>

목 차

I.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	1
II. 심사경과	2
III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	3
IV. 대체토론의 요지	3
V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	4
VI. 심사결과	4
VII. 소수의견의 요지	4
IX.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	4

※ 붙 임 :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

2024회 계 연 도

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2025. 8.

국토교통위원장

I.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1. 국토교통부 소관

- 교통시설특별회계(교통체계관리계정) : 세출

Ⅱ. 심사경과

1. 제출 일자 : 2025. 5. 30.

2. 회부 일자 : 2025. 6. 2.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☐ 제428회 국회(임시회)

○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8. 19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

○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(2025. 8. 20.)

상정, 심사, 원안의결

○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8. 21.)

상정, 대체토론, 원안의결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박재유, 전문위원 : 임종수)

1. 국토교통부 소관

2024년 예비비 지출(총지출 기준) 현황을 살펴보면,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의 환급금 추가 확보를 위하여 일반예비비 276억원을 배정받아 272억원을 집행(98.5%)하였음.

【 2024년 예비비 결산 】

(단위: 백만원)

집행내역	예비비(증)	예산현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합 계	27.600	27.600	27,181	-	419
○ 교통시설특별회계	27.600	27.600	27,181	-	419
-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(4931-354)	27.600	27.600	27,181	-	419

Ⅳ. 대체토론의 요지

○ 없 음

V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

-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, 「국회법」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기로 함.

VI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VII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IX.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

<붙 임>

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 결과

1.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: 총 106건(결산·예비비 합계)

(단위: 건)

부 처 명	변 상	징 계	시 정	주 의	제도개선	(중 복)	합 계
국토교통부	-	-	2	18	79	(1)	98
국토 분야	-	-	-	8	49	(1)	56
교통 분야	-	-	2	10	30	-	42
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	-	-	2	1	3	(1)	5
새만금개발청	-	-	-	1	2	-	3
합계	-	-	4	20	84	(2)	106

2. 시정요구사항(예비비)

가. 국토교통부

(교통 분야)

연번	시정요구명	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		시정요구 유 형	조치대상 기 관
1	K-패스 사업 관련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지역 차별문제 해소 필요	관련사업명	교통시설특별회계(교통체계관리계정) -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(4931-354)	제도개선	국토교통부
		지적사항	○ ‘대중교통비 환급 지원(K-패스) 사업’은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의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,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출액의 20~53.3%를 자치단체경상보조(국비 50%, 지방비 50%)를 통해 환급해주는 사업임. ○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K-패스 미참여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,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이 지방도·시·군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 장벽으로 작용함. ○ 환급 예산 부족으로 400억원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였으며,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매칭 지방비 부족으로 환급액 감액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.		
		시정요구사항	○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및 환급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로 이·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, 미지원 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		

3. 부대의견

○ 없음